

광주 구시청 상권 '끝없는 쇠락'...활성화 사업도 '중단'

한 집 건너 '폐업'... 건물 통째 임대
압축식거리 등 '실패'... 예산 전부
'충장축제' 지원범위 안돼 '소외'
상인 "근본적 상권회복 방안 절실"

"한때는 구시청 사거리에 발 디딜 틈 없
이 사람들로 북적이던 때가 있었지. 지금
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 장사가 안되니 가게들이 문을 열지를
않아."

광주 동구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현 아
시아음식문화거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
는 윤모(82)씨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손님은 어쩌다 한두 명. 구시청
상권의 쇠락을 견디지 못한 인근 세탁소
들이 모두 문을 닫아 이제 남은 곳은 윤씨
의 가게뿐이지만, 그 역시 세탁소 장사로
는 집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씨는 "몇 년 전부터 구시청 사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더니 이제
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다"며 "세탁소
문을 연지 40년이 넘었는데 상권이 이러
게 쇠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건물에
서도 지금 우리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푸
념했다.

구시청 사거리 일대가 관공서 이전 이
후 인구 이동 및 감소 등에 따른 도심공동
화 영향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
권 회복을 위한 활성화 대책은 요원하기
만 하다.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상인들이 줄폐업하고
있는 와중에 상무지구·수완지구·침단·동
명동 등의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주 소비
층인 2030세대의 발길이 끊겨 상권 침체
가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7일 구시청 일
대를 돌아본 결과, 가게가 한 집 건너 줄줄
이 폐업해 있고, 광주풀리 '열린공간'을
중심으로 그나마 유동 인구가 있는 사거
리 주변 점포에도 '임대' 문구가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물

하나를 통째 임대로 내놓고 있는 곳도 부
지기수였다. 예전같으면 새벽까지 손님들
의 발길이 끊기지 않아 24시간 불을 밝히
던 식당도 이제는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문을 닫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시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은 태부족이다.

동구는 지난 2014년 상권을 살리기 위
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및
구시청 사거리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로 지정, '청년 창업지원', '나이트 페스티
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사
업이 정체된 상태로, 올해 '아시아음식문
화거리'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음식공방
(쿠킹클래스)', '빛의 거리 조성', '도로
정비' 등 총 3건이 전부였다.

지난해에는 '도심야간문화거리 축제
(3회)', '아시아음식점 유치사업 지원
(6차)' 등의 사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재정 문제로 지방비 예산을 매칭 받지 못
해 관련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관련 연도별 예산은 총 10억원으로,
충장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충장상권 르네
상스'에만 올해 21억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실제 구시청 사거리와 도로 하나를 사
이에 둔 충장로 일대에는 '충장상권 르네
상스', '충장축제'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구시청 상인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충장
축제의 경우 '충장로'를 중심으로 진행되
는 사업이다 보니, 충장로 1~3가, 4~5가,
민주광장, 예술의 거리 등만 축제 거리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 구시청 상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구시청 상인들은 일시적 인구 유입
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상권 회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
고 입을 모으고 있다. **▶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장흥군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7일 전남도와 장흥군, 전남일보 공동 주최로 장흥 용산면 소등섬 해안가 일대에서 열
린 '2024 장흥 바다살리기 실천대회'에서 이천영 장흥 부군수, 맹점선 장흥 용산면 남
포어촌계장, 김지수 장흥 해양구조대 대장, 완도해양경찰서 명예감시원, 전남일보 김기중 사업본부장 등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나건호기자**

윤 "국민들에게 무조건 잘못... 사실과 다른 것 많아"

"특검, 반헌법적 발상 정치선동"
공천개입 의혹 "부적절한 일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와 관
련한 각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
련 논란 등 최근 난맥상에 대해, "국민들한
테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
고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앞
으로 쟁기고 또 살피서 국민 여러분께 불
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화문 발표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제가 사과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과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며 "명씨에

게 (산단 정보를)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한 거면 그건 사실과 다
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그
렇다고 대통령이 팩트를 가지고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세 번째로 추진 중
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의 특검
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
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
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헌법에 반하는 발
상이고, 정치선동"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로 제기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선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며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
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외교 관례상, 국의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
고 사실상 중단했고, 이런 기초를 이어왔
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인사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
혹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
데 육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
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
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2024 보성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 일시 11월 13일(수) 오후 2시 • 장소 보성군 회천면 울포항 해안가 일대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